
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

2016. 11. 29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. 수립배경 및 경과	1
II.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과 한계	2
III. 추진 방향	4
IV. 전략별 추진과제	5
[전략①] 시장 유통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	5
[전략②]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 전면 개편	7
[전략③]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	12
[전략④] 기업의 역할 확대	15
V. 향후 계획	17

I. 수립배경 및 경과

□ (배경) 가습기살균제 사고* 재발 방지 필요성 제기

* 인명피해('16.11.25 기준) : 신청 5,215명, 판정 258명(생존 145, 사망 113)

○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

< 국무회의 지시사항('16.5.10) >

- ◇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방향제, 탈취제 등 일상 생활에서 나오는 **생활화학제품**이 많은데 안전성에 대해 **국민의 불안도** 커지고 있음
- ◇ 화학제품 관리 일체를 철저하게 재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, 외국의 제도도 분석하여 **근본적인 안전관리 방안**을 마련할 필요

□ (경과)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 파악, 외국제도 분석 등 추진

○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일부 제품 성분 조사*('16.6~7)

* 방향제 등 15개 제품군 총 2,911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, 살생물질은 185종, 발암·돌연변이·생식독성물질은 161종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됨

○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에서 재발방지 방안* 제안('16.8~10)

* 제품함유 화학물질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,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

○ 선진국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조사·분석('16.6~11)

■ EU(유럽연합)

- 살생물질 함유제품 : 물질승인·제품허가(BPR: Biocidal Product Regulation)
- 발암물질 함유제품 : 제품 내 물질신고 및 등록, 제품 사용 허가·제한
(REACH: Registration, Evaluation,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규정)

■ 미국

- 살생물질 함유제품 : 제품등록(FIFRA: Federal Insecticide, Fungicide, and Rodenticide Act)
- 일부 생활화학제품 : 자가인증 및 검사(CPSA: Consumer Product Safety Act)

■ 일본

- 일부 생활화학제품 : 함유량과 용출량, 발산량 기준 설정·관리
(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)

II.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과 한계

현 황

- (의약외품·화장품) 식약처에서 약사법, 화장품법으로 제품과 이에 함유된 화학물질까지 통합 관리

* 의약외품 : 제조업신고, 원료 규격 및 표준제조기준 준수, 품목별 허가·신고
화장품 : 제조업등록, 사용금지·제한물질 지정, 안전기준 준수, 전성분 표시

- (기타 생활화학제품) 화학물질은 화평법*으로,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소관부처별로 개별법으로 별도 관리

*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

물 질	관 리 방 식			물 질 은 화 평 법(환경부), 제 품 은 개 별 법 에 서 관 리				제 품 및 함 유 성 분 통 합 관 리(식약처)			
	관 리 방 식			▶ 화평법(화학물질등록평가법)			▶ 약사법		▶ 화장품법		
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(16,000여종 유통중)• 유해성정보 등록 → 심사 → 허가·제한·금지물질 지정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원료의 규격 고시 : 대한민국약전(KP)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(KQC) 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원료 위해성 평가 → 사용금지·제한물질 고시		
	관 리 방 식			복지부	산업부	환경부	의약외품 (46종)		화장품 (12유형)		
제 품	관 리 대 상			▶ (구)공중위생 관리법 • 규격·기준 ※ 부칙에 따라 관리	▶ 공산품안전법 (품공법) ▶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(전기용품법) • 안전·표시기준	▶ 화평법 • 위해성 평가 • 안전·표시기준	• 제조업 신고 • 표준제조기준 • 품목별 허가·신고		• 제조업 등록 • 안전기준 • 전성분 표시제		
	관 리 대 상			위생용품 (5종) 세척제, 헹굼 보조제, 1회용 물컵, 숟가락, 젓가락, 위생종이, 이쑤시개	공산품·전기 용품 (274종) 습기제거제, 부동액, 워셔액, 화장비누(고형), 양초, 일화용기저귀, 섬유제품, 가구, 금속장신구, 건전지 등 이온발생기	위해우려제품 (15종) 세정제, 접착제, 코팅제, 탈취제, 방향제, 방청제, 문신용 염료 등 소독제(가정용), 방부제, 방충제	소독제(인체·방역용), 가습기 살균제, 파리·모기 구제제, 살충제(방역용) 등		삼푸, 향수, 물비누 등		
비 관 리			오존 발생기, 칫솔살균제 등			살생물제품		휴대용 산소캔		제모왁스, 흑채	
			팬티라이너			프린터 토너 눈 스프레이 향균필터					

한 계

□ (유통제품)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 가중

- 국내 유통 중인 제품의 **함유물질 파악**이 미흡*하고, **안전·표시기준 위반 제품**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사례** 발견

* OIT 항균필터, CMIT/MIT 치약 등 ** 문신용염료 기준위반사례 적발('16.10)

□ (관리체계) 제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지속 발생

- 물질 유출가능성이 있는 제품*이 **위해성평가** 없이 관리되거나,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**새로운 유형**의 제품**이 지속 출시

* 일회용기저귀, 습기제거제, 워셔액 등 ** 휴대용 산소캔, 제모왁스 등

- PHMG, CMIT/MIT, OIT, DDAC와 같은 **살생물질***(1,000여종 추정, EU기준) 함유 제품을 **엄격하게 관리하는 체계 부재**

* 미생물,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,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

- **고위험물질***(1,300여종 추정, EU기준)의 제품 사용을 **사전에 차단**하는 화평법 상의 **허가·제한·금지물질** 제도 활용 **미흡**(72종만이 지정)

* 발암성, 돌연변이성, 생식독성, 고잔류성·고농축성, 잔류성·농축성·독성물질

□ (관리수단) 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질정보와 이행수단 부족

- 현재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 **16,000여종**(10년 기준) 중 약 15%만 유해성심사가 완료되는 등 물질정보가 부족해 **제품 안전성 검증** 애로

- 위반 사업자 **처벌 규정**이 **불완전***하고, 제품정보 **제공 시스템**이 **부처별로 분산** 운영되어 국민의 정보접근이 불편

* (예) 화평법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,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달리 기준 부적합 위해우려제품의 판매중개업자, 구매·수입대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

□ (기업역할) 제품 안전관리에 있어 기업의 책임감 있는 대응이 결여

-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한 **성분정보 공개**와 소비자 소통이 미흡
- 원부자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**제품의 제조 전(全)과정**에서 안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

Ⅲ. 추진 방향

비 전	생활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회
목 표	<p>[단 기] 유통제품 조사·퇴출, 기업역할 확대</p> <p>[중장기]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개편 및 이행기반 구축</p>

전략 및 과제	전 략	추진 과제
	1 시장 유통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및 위해성평가 • 유통제품의 상시 안전 점검 강화
	2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 전면 개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활화학제품 관리 소관부처 정비 •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 도입 •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제한 강화
	3 제품 관리 제도 이행기반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·공유 • 위반 사업자 처벌 강화 등 이행수단 확보
	4 기업의 역할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분표시 등 제품 안전정보 소통 강화 • 자발적 제품 안전관리 강화

IV. 전략별 추진과제

1

시장 유통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

- ◆ 시장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'17.6월까지 전수조사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, 조사결과 공개 및 위해성이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
- ◆ 그 이후에도 생활화학제품을 상시조사하여 기준 위반제품을 퇴출하고, 소비자기관·단체와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

1.1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및 위해성평가

□ 제품성분 전수조사 실시(환경부, 산업부, 복지부, 식약처)

- 금년 내 위해우려제품(화평법에 따른 방향제 등 15종), 공산품(품공법에 따른 부동액 등 87종) 중 물질 유출 가능성이 큰 제품* 조사 완료

* 습기제거제, 부동액, 워셔액, 양초

- 의약외품, 위생용품(세척제, 물종이류) 내 CMIT/MIT 함유실태 조사

-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·전기용품과 비관리제품 조사 계획을 금년 내 수립하고, '17년 상반기까지 조사 완료

-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비점* 개선 병행 추진

* (사례) 비관리제품은 사업자가 성분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 부재

- 제품 목록은 전수조사 완료 후 공개하고, 성분 등의 영업 정보는 기업 동의과정을 거쳐 공개(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, ecolife.me.go.kr)

□ 제품 위해성 평가, 결과 공개(환경부, 산업부)

- 전수조사된 제품에 대해 사용빈도, 물질유해성 등을 고려해 위해성 평가 우선순위를 정하고, 단계적으로 평가('16.9~, 국립환경과학원)

- 위해성평가 결과, **위해(危害)가 높은 것으로 확인*** 되는 경우 **제품명 공개**, 해당제품에 대한 **제품회수** 및 **안전기준 마련**

* 민관합동 검증위원회('16.6 구성)에서 논의·결정

< 전수조사, 위해성평가 추진일정 >

제품 구분			전수조사	위해성평가·공개
위해우려제품	스프레이형	방향제·탈취제·세정제	~'16.12	~'16.12
		코팅제, 접착제 등 12종		~'17.6
	非스프레이형			~'17.12
공산품·전기용품	습기제거제, 워셔액, 부동액, 양초		~'17.6	'17.7~
	기타 화학물질 유출 우려 제품			
비관리제품	화학물질 유출 우려제품			

1.2 유통제품의 상시 안전 점검 강화

□ 안전·표시기준 위반제품 조사·퇴출(환경부, 산업부, 식약처)

- 스프레이형, 대량 유통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하고, 안전·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온·오프라인 마켓에서 퇴출
- 유통 중인 의약외품, 화장품의 허용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 및 원료 관리 강화

※ 시장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보존제, 중금속 등 검사('17년 중 의약외품 600건, 화장품 1,600건 이상)

☞ 치약에 CMIT/MIT 혼입원료 사용 유사사례 재발 방지

□ 소비자기관·단체, 부처간 협력 강화(환경부, 산업부, 식약처, 소비자원)

- 사후대응 중심인 '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(CISS)*'을 사전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여 소비자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

*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,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안전센터 운영

- 포털, SNS 등 외부 데이터를 활용, 잠재적인 위해정보 수집·분석하여 소비자 신고 또는 피해 발생 전에 위해 요소를 조기 발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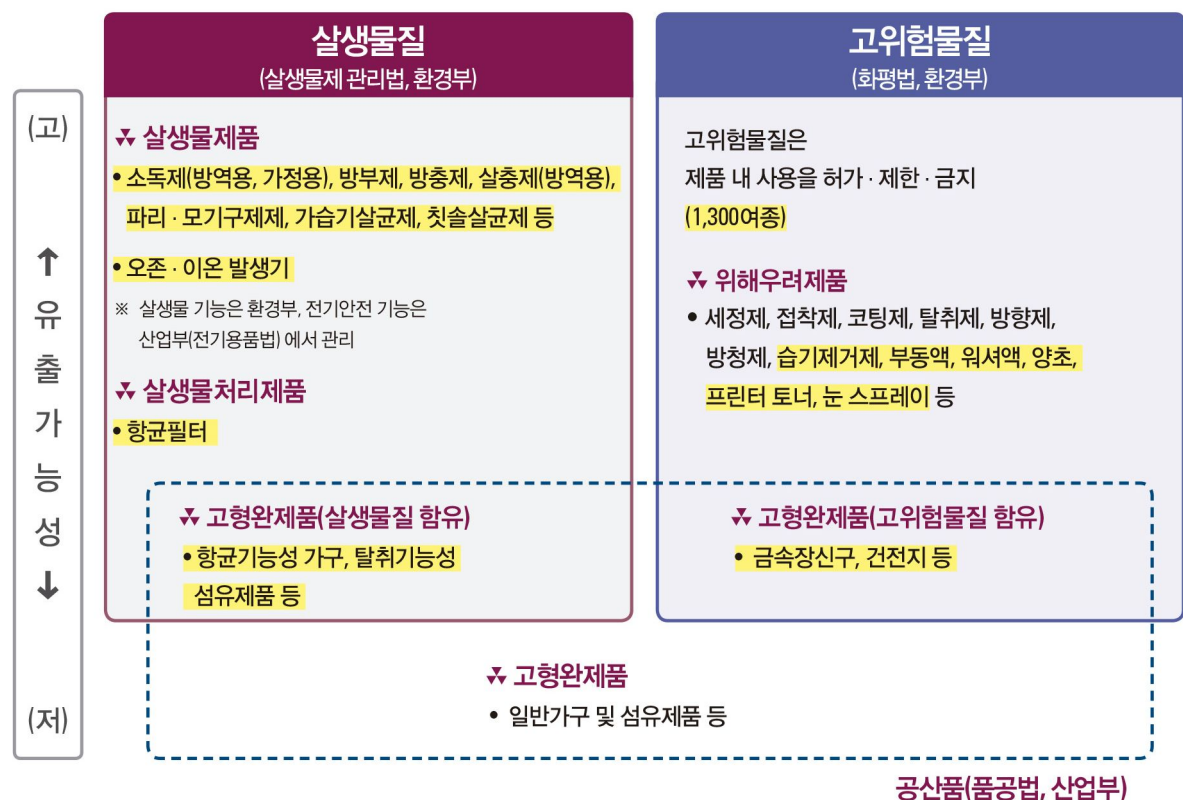
-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, 부처별 안전·표시기준 점검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

- ◆ 제품의 용도, 함유물질의 유출여부·유해정도에 따라 소관부처 조정
 - (식약처) 인체·식품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제품
 - (환경부) 살생물제, 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
 - (산업부) 물질 유출 가능성이 낮은 고형완제품
- ◆ 살생물질과 함유제품에 대해 승인·허가제 도입(살생물제관리법 제정)
- ◆ 화평법 상의 허가·제한·금지물질 제도를 보완(화평법, 화관법 개정), 활성화하여, 고위험물질의 제품 함유를 사전에 차단

인체·식품 직접 적용 제품 : 약사법, 화장품법, 위생용품법(식약처)

- ✧ 의약외품 : 콘택트렌즈 용액, 치약, 구충청량제, 소독제(인체용), 휴대용 산소캔 등
 - ✧ 화 장 품 : 샴푸, 향수, 물비누, 화장비누(고형), 제모왁스, 흑채 등
 - ✧ 위생용품 : 세척제, 행균보조제, 1회용 물컵·숟가락·젓가락, 위생종이, 이쑤시개, 일회용 기저귀, 팬티라이너
- * 문신용 염료는 추후 품목 분류

기타 생활화학제품 : 살생물제 관리법(가칭), 화평법, 품공법, 전기용품법(환경부, 산업부)



■ 관리체계가 정비되는 제품

2.1 생활화학제품 관리 소관부처 정비

□ (인체·식품 직접 적용제품) 의약품·화장품·식품안전 분야 전문성을 고려하여 식약처에서 제품과 함유물질을 통합 관리

※ 위생용품은 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이관(위생용품관리법 제정, '16.10.25 국회제출)

□ (기타 생활화학제품) 물질유출 가능성과 위해 정도에 따라 부처 조정

○ (환경부) 살생물제와 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위해성평가 전문성을 고려해 환경부(화평법, 살생물제관리법)에서 관리

○ (산업부) 물질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현행대로 산업부(품공법, 전기용품법)가 관리하는 체계를 유지하되,

- 살생물질, 고위험물질의 제품 함유 제한은 살생물제관리법(가칭)과 화평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체계 활용

□ 향후 새로운 형태 융합제품 등 비관리제품에서 위해성이 발견되는 경우 제품안전협의회*에서 소관부처를 결정

* 국조실, 환경부, 산업부, 식약처 등 관계부처 참여

< 소관부처 조정(안) >

제 품	현 행	조 정	
문신용 염료	• 환경부(위해우려제품)	식약처	의약외품 · 화장품 · 위생용품
화장비누(고형)	• 산업부(공산품)		
팬티라이너	• 비관리제품		
성인용·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	• 산업부(공산품)		
흑채, 제모왁스, 휴대용 산소캔	• 비관리제품		
세척제, 행굼보조제	• 복지부(위생용품)	환경부	위해우려 제품· 살생물제
부동액, 자동차 워셔액, 양초, 습기제거제	• 산업부(공산품)		
프린터토너, 눈 스프레이, 인주·도장잉크, 수정액, 비누방울액	• 비관리제품		
소독제(방역용), 가습기살균제, 살충제(방역용), 파리·모기구제제	• 식약처(의약외품)*		
이온발생기**	• 산업부(전기용품)		
오존발생기**, 칫솔살균제, 항균제품	• 비관리제품		

* 살생물제관리법 시행과 동시에 식약처에서 환경부로 이관

** 살생물 기능은 환경부, 전기안전 기능은 산업부에서 관리

2.2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 도입 (환경부)

□ 살생물제 관리법(가칭) 제정

- EU, 미국과 같이 **살생물질과 함유제품**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**법률 제정**(19.1월 시행 목표)

※ 화평법 상의 위해우려제품 조문을 살생물제관리법으로 이동하여 환경부 소관제품을 단일법으로 통합하고 법 명칭은 수용성을 고려하여 결정

< 살생물제 정의 및 예시 >

살생물제	정의	예시
살생물질	유해생물을 제거, 제어, 무해화(無害化),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	PHMG, PGH, CMIT/MIT, OIT 등
살생물제품	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	소독제, 방충제, 살충제, 방부제, 가습기살균제, 오존/이온 발생기 등
살생물처리제품	살생물질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제품 중 유해생물의 제거 등이 주 기능이 아닌 제품	항균 에어컨필터, 모기퇴치 옷, 탈취 양말, 보존제가 함유된 세정제·방향제·탈취제 등

※ OIT는 살생물질, OIT로 만든 보존제는 살생물제품, OIT 보존제로 코팅한 항균필터는 살생물처리제품

☞ **가습기살균제, OIT항균필터 같은 안전성 미검증 살생물제 유통 차단**

□ ‘살생물질’ 승인제도 도입

- **(신규출시)** 살생물질 또는 살생물제품 제조·수입자가 살생물질의 안전성·효능 자료를 제출하고, **정부가 평가 후 승인***

* 승인시 살생물질이 사용가능한 제품종류와 사용방법, 사용자 범위 등 설정

- **(기존유통)** 시장 유통 중인 살생물질은 **정부에 신고하여 승인유예기간(최대 10년*)**을 부여받고, 신고자는 유예기간 내 평가자료 제출

* EU도 살생물제품 규제를 도입('98)하면서 10년의 유예기간('01~'10)을 부여했으나, 평가에 장시간이 걸려 14년 연장 ('24년 평가 완료 목표)

- **(정보공개)** 정부는 승인된 살생물질과 그 물질을 사용가능한 제품 종류 등의 정보를 **목록(positive list)**으로 작성하여 공개

※ 승인된 살생물질은 승인 내용대로 제조·수입하는 경우, 화평법상 등록한 것으로 간주

□ ‘살생물질 함유제품’ 관리체계 마련

- (살생물질제품) 살균제, 살충제 등 주 기능이 유해생물의 제거·퇴치 등인 제품은 시장 출시 전에 허가받도록 의무화
 - 살생물질제품은 승인받은 살생물질만 사용 가능
 - 살생물질제품 제조·수입자가 제품 자체의 안전성·효능, 표시사항 등 자료를 제출하고, 정부가 평가한 후 허가*
 - * 허가시 표적생물, 사용법·사용량, 사용자범위, 부작용, 유통기한 등 설정
 - “무독성”, “친환경”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 금지
- (살생물질처리제품) 살생물질로 표면처리 등을 한 제품은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승인 내용대로 사용하고, 해당 물질명 표시 의무화

2.3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 강화(환경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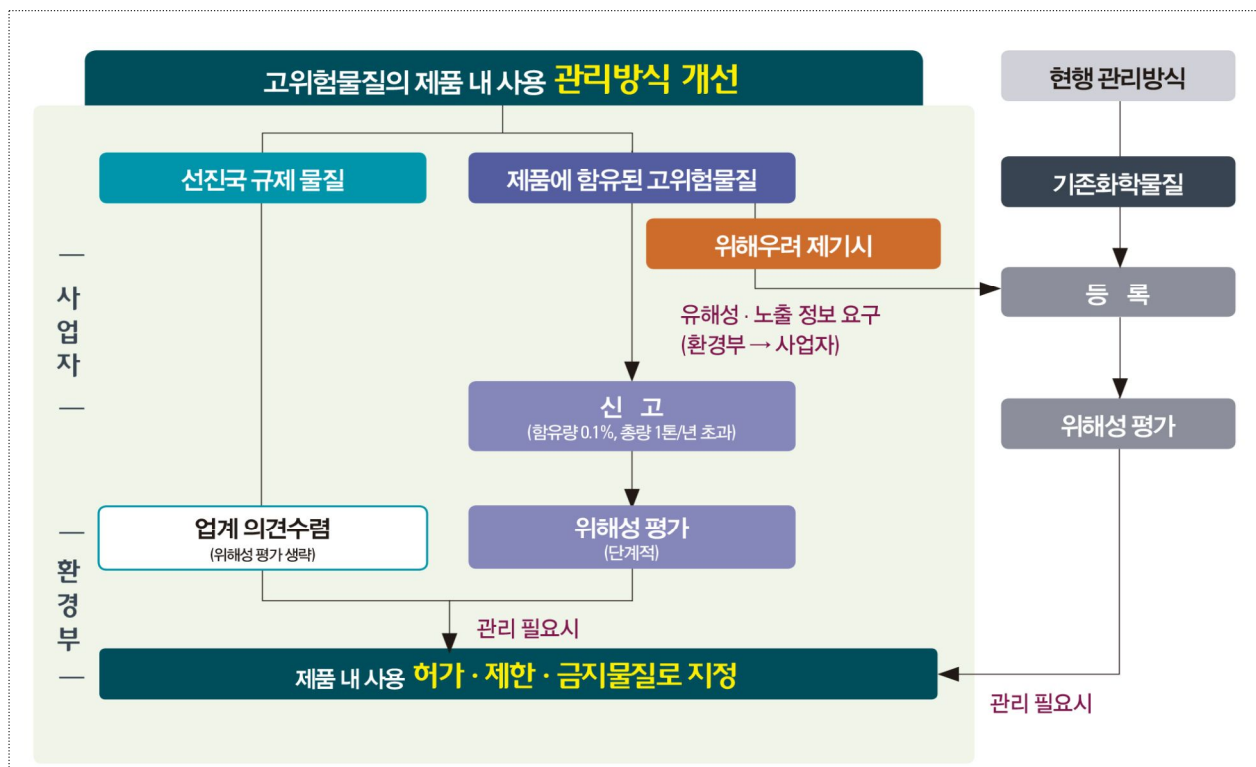
□ 제품 함유 허가·제한·금지물질 확대

- 고위험물질은 물질 단계부터 제품 내 함유를 사전적으로 허가·제한·금지 조치(대상물질 확대, 현행 72종 → 향후 1,300여종)
 - 특히, 유럽연합* 등 선진국에서 지정한 규제물질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제품 내 허가·제한·금지물질로 지정
 - * 허가물질: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제품에 사용
제한·금지물질: 특정 용도 또는 모든 용도에 사용을 금지하거나 농도 제한
- 고위험물질 함유제품 제조·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의 정보를 정부에 신고*
 - * (현행) 유해화학물질(800여종) 함유 0.1%, 총량 1톤/년 초과(고형완제품 제외)
(개선) 고위험물질(1,300여종) 함유 0.1%, 총량 1톤/년 초과(고형완제품 포함)
다만, 사용·폐기시 함유물질의 인간/환경 노출이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 면제
 - 정부는 제품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, 관리 필요시 허가·제한·금지물질로 지정

□ 허가·제한·금지물질 제도 보완

- 허가·제한·금지물질 취급시 수반되는 규제 중 제품 안전관리와는 관련성이 낮은 **사업자 영업허가** 등은 **합리화**(화관법 개정)
 - ※ 화평법상 허가·제한·금지물질로 지정된 물질 취급시 화관법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됨(영업허가, 도급신고, 취급기준 준수 등)
- 선진국이 지정한 규제물질을 허가·제한·금지물질로 지정시 위해성 평가, 사회경제성분석 등 절차를 필요시 생략하도록 개선(화평법 개정)
- 허가물질은 정부의 허가 없이는 사용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되, 허가면제 용도를 고시해 합리적으로 규제(화평법 개정)
 - 물질을 허가 받으려는 경우에는 물질 대체계획 제출 의무화
-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유해성·노출정보 등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(화평법 개정)
 - ※ (현행) 제품 내 물질의 유출이 의도적인 경우에만 등록
(개선) 화학물질 유출이 비의도적이더라도 위해우려시 등록 요구(화학물질 등록평가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)

< 고위험물질 제품 내 사용 관리방식 >



◆ 고위험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'19년까지 확보 완료하는 등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해 제품의 위해성* 파악에 활용

* 유해성: 물질 고유의 독성, 위해성: 유해물질이 노출되어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(=유해성×노출빈도×지속시간×강도)

◆ 위반사업자 처벌강화, 정보제공체계 개선 및 관련기관 전문성 보강

3.1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·공유

□ 유해성 정보 선진 외국자료 확보(환경부)

- 국제기구, 외국기관 등에서 공개한 유해성 정보 일제 조사(~'19)
 - (1차) 유럽화학물질청(ECHA), 미국 환경청(EPA), 세계보건기구(WHO) 국제암연구소 등에서 공개한 유해성 정보 수집·평가('16~'17)
 - (2차) 학술논문, 연구보고서 등에 수록된 유해성 정보를 조사하여 신뢰성 검증('18~'19)

국가/기구	보유정보
유럽화학물질청	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보고서
WHO 국제암연구소	발암물질 관련 연구 보고서
미국 EPA	국가독성 프로그램, 통합위해성 정보시스템, 수생독성자료
OECD	대량생산 화학물질 스크리닝 위해성 평가정보
일본	유해성 평가서, 초기위해성 평가서 등

□ 기업의 유해성 정보 등록 가속화(환경부)

-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(1톤/년 미만)은 제조·수입량과 관계없이 등록 대상으로 별도 고시
- 제조·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모든 기존화학물질(7천여종)의 등록 기한 설정(화평법 시행령 개정)

※ 유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있는 물질 등은 고시를 통해 제외

- 등록기한 : 고위험물질('19) → 1,000톤/년 이상('20) → 100톤/년 이상('23) → 10톤/년 이상('26) → 1톤/년 이상('30)

※ 국내 정보생산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일시에 등록하거나 기한을 너무 짧게 설정할 경우 정보를 외국에 생산 의뢰하거나 고가에 구매해야 하는 문제 발생 (EU도 REACH 도입 11년 후를 등록 최대기한으로 설정)

○ 등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병행 시행

- 공동등록*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등록대상자를 확인하는 제도(사전등록제) 신설

* 기존화학물질을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대표자를 정하여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 하여야 함 (화평법 제15조)

- 제조·수입량이 1~10톤/년에 해당하는 물질(2,600여종)은 정부에서 직접* 유해성자료를 생산('17~'26)하여 기업에 제공

* 1~10톤/년 물질은 업체 규모가 영세해 정보 생산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관 역할분담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

- 유럽화학물질청 평가 완료물질, GLP* 기관에서 시험한 물질 등 신뢰할 수 있는 유해성 정보가 있는 경우 시험자료 제출 면제

* Good Laboratory Practice : 우수실험실운영기준

○ 환경 만성독성시험 등 유해성 시험기반(GLP) 확충(환경부, 산업부)

※ 국내 GLP 기관은 30개소로 급성경구독성 등 32개 항목의 시험기반은 구축되어 있으나, 물벼룩만성독성 등 15개의 시험항목은 취약('16.11월 현재)

□ 유해성 정보 전달 강화(환경부)

- (제조·수입자) 유해화학물질은 함량·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물질의 구매자에게 화학물질 명칭,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의무화

※ 화평법(제29조)은 등록된 화학물질 정보만 하위사용자에게 제공토록 규정

- (정부) 화평법에 따라 등록된 물질정보는 환경부가 고용부에 즉시 제공해 작업자 안전관리에 활용

※ 화평법 시행규칙(제24조)은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만 그 결과를 고용부에 통보

3.2 위반사업자 처벌 강화 등 이행수단 확보

□ 위반사업자 처벌 강화(환경부, 산업부)

- 사업자의 제품위해성·결함 보고 의무* 강화, 과태료** 상향, 과징금 부과 신설 등 처벌규정 개선(살생물제법 제정,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)
 - * 미국 유해물질통제법(TSCA)은 사업자가 화학물질, 혼합물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알게 된 경우 환경청장에게 즉시 통보토록 의무화
 - ** 제품안전기본법 상 보고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이 낮음
(1차:3백만원→2차:4백만원→3차:5백만원)
-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제품을 수입·통신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사, 통신판매중개자 처벌 규정 마련(살생물제관리법)
- 친환경 위장제품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당 광고 판단 및 처벌기준* 마련(환경성 표시·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정)
 - * 거짓·과장, 기만, 부당비교, 비방 광고 구체화 및 과징금 산정기준 등 규정

□ 생활화학제품 정보 제공체계 개선(환경부, 산업부, 식약처)

- 부처별로 운영 중인 제품정보 사이트*를 '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(ecolife.me.go.kr)'으로 연계하여 한 곳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
 - *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(환경부), 제품안전정보센터(산업부), 독성정보제공시스템(식약처),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소비자원)
- 소비자가 불법·위해의심 제품을 신고하는 기능을 시스템에 추가

□ 생활화학제품 관리 기능 및 전문성 보강(환경부, 산업부, 식약처)

- 국립환경과학원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제품 관련 유해성 조사,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능 확대('17~)
- 여러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산품 제품안전확인 신고업무를 일괄 처리·관리하도록 제품안전협회를 제품안전관리원으로 개편(~'17)
- 제품 내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예방·조사·후속조치를 위해 환경산업기술원 내의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운영 확대('17~)
 - ※ 불법·불량 제품 신고·접수, 응급의료센터 안내 등을 담당하는 콜센터 운영

- ◆ 생활화학제품 제조·수입자 스스로 제품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정부와 공유하는 등 기업의 책임성 강화
- ◆ 성분 점검, 모니터링, 안전 최우선 경영 등 기업의 제품 안전관리 강화
- ⇒ 정부와 기업과 협약(MOU)을 체결하여 실행계획('17~'20)을 수립·이행하고, 정부는 지원 역할 수행

4.1 성분 표시 등 제품 안전정보 소통 강화

□ 위해우려제품의 성분·유해성 정보제공 확대(환경부)

- 위해우려제품의 전성분과 배합비 제출 의무화(~'16.12, 고시개정)
- 유해화학물질, 살생물질은 함량에 관계없이 성분명, 독성, 사용이유 등의 정보를 제품 포장에 표시(~'16.12, 고시개정)
 - 유해성 표시를 세분화하여 유해한 정도(예: 위험/경고/주의)와 내용(예: 부식성, 눈 자극성 등)을 구체적으로 표시(~'18, 고시개정)
- 제품과 함유 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인 제품안전보건자료(PSDS; Product Safety Data Sheet) 작성설명서 마련(~'18)

□ 제품 전성분 자발적 공개(참여기업, 환경부, 식약처)

- 기업은 생산·수입 제품에 함유된 물질 전성분을 공개
 - 용어통일을 위하여 성분사전 발간, 공개방식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개를 위한 틀을 마련하고, 선도기업*부터 성분공개(~'18)
 - * (참여기업) 애경, CJ라이온, 유한크로락스, 한국피죤, 한국P&G, 헨켈홈케어코리아, 옥시레킷벤키저, SC존슨코리아, LG생활건강 등
 - 전성분 자발적 공개에 따른 성과분석 후 제도화 방안 검토('19~)
 - ※ 국제적으로 전성분 공개는 화장품, 문신용 염료에 불과함
-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성분 정보와 안전 정보를 '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(ecolife.me.go.kr)'에 공개

4.2 자발적 제품 안전관리 강화(참여기업, 환경부, 식약처)

□ 제품 성분 및 피해사례 자체 일제점검

- 생산·수입제품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 후,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과 안전기준 미달제품은 자발적 회수조치하고, 정부에 실적 보고
- 제품 생산에 사용한 원료물질을 전수조사하여 관련법 준수여부와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토하고, 필요시 원료물질 변경
-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을 전면 조사하고, 제품 관련 문제점 발견시 해당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

□ 제품 안전 최우선 경영 및 관리역량 제고

-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소비자 안전을 기업 활동의 기본 목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임직원들의 제품 안전관리 책임의식을 제고
 - 제품안전 전문부서 신설·강화, 독성학·위해성평가 분야 인력 보강 등 전문성 제고, 제품안전 관련 자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※ 정부는 위해성 평가를 위한 표준화, 관련 교육,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

□ 자율적 제품 표준·안전관리지침 마련 및 이행

- 법정 의무사항보다 더 엄격한 제품 표준·관리지침을 자발적으로 마련하여 품질 제고 및 향후 제도 강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
-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원청업체에서 제품 함유 성분에 대한 안전기준 및 관리기술 개발·지원
- 원부자재의 유해성 정보 확보 등 원료부터 최종제품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
- 대·중소기업간 공동체를 구성, 제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공유하고, 제품관리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제품 안전관리 분야 협력 강화

V. 향후 계획

- (조치 계획) 관련 기관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전략적 추진
 - (단기) 안전·표시기준 개선 등은 '17년 상반기 내에 완료
 - (중기) 법령 제·개정 등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'18년까지 완료
 - (장기)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개선 등 단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매년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
- (점검·관리) 반기별 추진상황을 점검·관리
 - 관계기관은 소관과제에 대해 자체 점검하고, 국조실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면점검,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
 - 생활화학제품 기업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·이행하고, 서면 또는 현장점검 실시
- (홍보 계획) 영상·인포그래픽 등 콘텐츠, 포털사이트, 정부 매체,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활용한 소통·홍보 강화